월/요/광/장

김성재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

한국사회에 마(魔)가 씐 2009년이 저물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일은 거의 예외 없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다. 야당과 재야가 꿈꾸어 왔던 인간답게 살만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 상식 있는 사람은 그 원인이 무리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와 국민과의 소통부족에 있다고 말한다. 분석적인 사람은 우리 사회의 난맥상을 권력체계와 경제체계의 강력한 결합에서 나타난 괴물체계에서 찾는다. 도덕적인 사람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관이 경제적 탐욕과 부귀로 환원된 나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왔다고 얘기한다.

모두 맞는 얘기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당장 바뀔 것은 하나도 없다. 분노만 마음속 깊숙이 쌓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 기록하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생에서 시작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을 거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박해하는 형태가 일관된 규칙성이 있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서로 천적이 되어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체계들이 환상적인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규칙성이다. 구체적으로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협업하고 있다. 현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검찰이다. 그때 언론매체의 중요한 과제인 권력과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을 권력형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조사할 때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검찰은 전 과정을 언론매체에 노출시켜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도록 유도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때 검찰과 언론매체는 일사불란하게 협조했다. 그 사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권력자와 하나가 된 검찰과 언론의 횡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행적은 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의 모 변호사의 개혁적인 사회활동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과 언론매체는 전 국무총리를 체포 수사·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과거 독재자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적을 제거했던 사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교묘한 메커니즘이 되풀이되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한국인은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이라는 마(魔)의 삼각지대에서 분노와 추위에 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권력과 검찰 그리고 언론매체가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권력은 인적·물적 자원을 한 사회의 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결정행위를 위해 존재한다. 위정자들의 결정행위의 대가로 국민은 표와 급여를 준다. 검찰은 권력의 편에 서는 대신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언론매체는 권력의 부정부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체계를 감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국격(國格)이나 국가 브랜드 가치는 국가원수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는다. 정권유지를 위한 잔인한 정치싸움, 권력에 순치된 사법체계, 권력과 밀월관계에 있는 언론매체 등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들이다. 무엇보다도 정적들의 스캔들 찾기에 몰두하는 정권, 검찰 그리고 언론매체가 활개를 치는 사회에서 희망 찾기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교수·사회과학대학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정렬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따뜻한 검찰권 행사

최근 국가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서민경제는 불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은 서민들로 하여금 생계형 범죄자로 내몰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민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검사실에서는 하루 끼니조차 먹기 힘들어 도둑질을 했다는 절도범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법정에서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영세사업자의 눈물어린 하소연도 자주 듣게 된다.

그동안 죄를 범한 사람의 어려운 경제 사정의 호소는 진부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들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과 정의는 따뜻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함께 할 때 빛날 것이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의 호소는 법무부와 검찰의 여러 조치와 노력으로 경청하여야 하는 양형요소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작년 이맘때쯤 검찰은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검찰권 행사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특별조치 중에는 선고받은 벌금형을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넓게 해석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 조치에 따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여야 하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벌금을 낼 수 없을 때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기 힘든 서민을 교도소에 감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배려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제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작업, 농촌일손돕기 등 서민 민생분야에 대해 집중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벌금 미납자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구금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꼽힌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건수는 전국적으로 현재 6천622여건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로 벌금 납부를 하여야 하는 서민들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민 경제를 위하여 취해진 법무부와 검찰의 여러 제도와 조치들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뽑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검사실에서 하루 끼니조차 먹기 힘들었다는 절도범의 고개숙인 푸념도, 법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영세사업자의 절규도 더 이상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기고

이영우

조합장선거 변해야 한다

농협조합장 선거 '복마전', '돈=당선' 의식 팽배, 뿌리깊은 '돈 선거' 관행, 돈 안 쓰면 표 못 얻어…

각종 언론에 보도된 조합장선거 관련 기사의 제목들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조사·조치를 담당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수밖에 없다.

올해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두 85개의 각종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했다. 그리고 고발 8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24건 등 모두 43건의 크고 작은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조치 유형을 살펴보면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인 고발과 수사의뢰가 19건이나 되고 이중 14건(74%)이 금품·음식물 제공이었다.

그렇다면, 조합장선거가 이토록 혼탁한 것은 무엇 때문이고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 전남도선관위에서 2008년 이후 실시된 조합장선거 후보자 및 조합선거 담당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선관위에 조합장선거 위탁 후 선거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깨끗해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선관위 감시·단속 영향(74.5%), 조합원의 공명선거 의지(16%), 후보자가 법규를 잘 준수했기 때문(7.5%)으로 후보자나 조합원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선관위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78.5%의 응답자가 후보자의 금품·향응 제공을 들었다. 또 불법선거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조합원들의 금품 등 요구(37.5%), 선거브로커의 권유·요구(29.5%), 후보자의 준법의식 부재(21.5%)를 들었다.

불법 선거의 효과적인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금품·음식물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45%), 조합원의 의식개혁(42%) 등의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조합원의 의식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직접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광주·전남에서는 50개가 넘는 조합장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연말연시 및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불·탈법이 심히 우려된다.

선관위에서는 조합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돈 선거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조합장선거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관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함은 물론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거나 들은 경우 선관위에 즉시 신고(1588-3939)해 주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조합장선거 '확' 달라졌다, '돈선거' 안 통해, '공직선거도 조합장선거처럼' 등 제목의 언론보도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담당〉

유아용 카시트 올바른 사용법 익혀야

유아용 카시트에 앉히기만 하면 우리 아이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카시트에 앉히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앉히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카시트의 경우 아이의 체중에 따라 장착방향을 달리해야한다.

몸무게가 10kg 미만인 유아의 경우 차의 진행방향 반대쪽 뒤보기 방향(후방장착)으로 설치해야 교통사고 시 겪을 수 있는 심한 목 꺾임 현상을 줄일 수 있다. 10kg이상의 유아에게는 차의 진행 방향인 앞 보기 방향(전방정착) 카시트를 설치하면 되는데, 충격 시 시속 300~320km의 속도로 팽창되는 에어백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백이 없는 좌석에 설치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카시트의 등받이는 아이의 머리 부분보다 높아야 하고 어깨띠는 아이의 어깨와 같은 선에 내려와야 하며, 어깨띠의 꼬임과 고장장치의 부착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품 안에 감싸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 밖으로 내보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카시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맡겨보자.

▲송희건·광주시 북구 태령동

식당 이용시 신발은 신발장에… 기본예절 지키자

가끔씩 식당, 상가, 잔칫집에 가면 아무데나 벗은 신발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여러 대중들이 모이는 시설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거리낌없이 신발을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서 흐트러지게 놔두고 들어가기 일쑤다.

반면 외국인들의 경우 언제나 자신의 신발은 자신이 꼭 신발장에 넣고 들어간다고 한다. 심지어 그네들은 침대생활을 하는데도 신발을 벗고 신는 생활에 젖어있는 우리보다 더 예의를 잘 지킨다. 또한, 일본인이나 재일교포들도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때 꼭 신발 코가 앞으로 나오도록 가지런히 두는 습성에 젖어 있다는데 우리는 너무 난하고 보기에도 추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에 걸맞게 이런 작은데서부터 기본예절을 지켜 선진문화의 대열에 진입해야 하리라 본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사설

잿더미 된 여수 향일암 또 예견된 人災인가

국내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인 여수 향일암이 화재로 대웅전과 문화재가 모두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번 향일암 화재는 허술한 재난 대비로 인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우선 소방당국의 늑장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시점에서 35분이나 지난 후였다. 그때는 이미 불길이 대웅전은 물론 종각과 종무실까지 옮겨 붙어 조기 진화에 실패한 것이다.

더욱이 향일암은 스프링클러인 미분무 설비시설이 갖춰져 있긴 하나 불이 난 3곳에는 공교롭게도 설치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향일암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실질적인 화재 진압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옥외소화전도 설치돼 있지 않은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다. 향일암은 화재에 특히 약한 목조건축물인데다 지리상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옥외소화전은 당연히 있어야 했다. 여기에다 암자 내 자체 저수조 용량도 겨우 3.5t에 불과해 화재 진압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수조 용량을 내년에야 100t으로 늘리기로 했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사찰에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폐쇄회로 TV조차 설치하지 않은 여수시의 안전불감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향일암 화재는 문화재 소방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흘러 넘쳤는데도 겉핥기 대책과 남의 눈을 의식한 형식적 훈련으로 그쳐 왔다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이 벌어진 후에야 대책을 세운다고 온갖 야단법석을 떨다 시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당국의 안전불감증에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맡겨야 하는지 답답하다.

녹색 경쟁력 높여야 지역발전 앞당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녹색 경쟁력'부문에서 전남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전남은 녹색혁신 잠재력 부문에서 16개 시·도 중 14위(0.005), 녹색혁신 노력과 의지 부문에서 7위(0.167), 그리고 녹색혁신 성과 부문에서 16위(0.036)를 기록했다. 이들 3개 부문을 평가한 종합지수 역시 0.258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의 녹색 경쟁력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남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국의 17.8%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2.4%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녹색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다. 정부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30%를 감축해야 가능한 목표다.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광주·전남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도입되면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6.99%, 부가가치는 -12.4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기업들은 대비태세를 갖춘 반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아예 준비조차 안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행정과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녹색 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녹색 성장에 필요한 국내 최고 수준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 지역이 재생 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방기곡경(旁岐曲逕)

'한국 지성의 정론지'를 표방하는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연말에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특징 짓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뜻의 호질기의(護疾忌醫), 2007년에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 각각 뽑혔다. 세태를 정곡을 찔러 표현한 사자성어는 얼핏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한다.

올해는 '샛길과 굽은 길'이라는 의미의 방기곡경(旁岐曲逕)이 선정됐다. 샛길과 굽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일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 조선 중기 유학자 율곡 이이가 왕도정치의 이상을 설파한 저서 '동호문답'에서 군자와 소인을 가려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소인배는 '제왕의 귀를 막아 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교수들이 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것은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정도를 걷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일부 정파와 세력의 이익을 얻기 위해 타협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편법과 독선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영석 광주대 교수는 "현안들을 진솔하고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려는 인상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로 옳음을 주장하지만 중도를 얻지 못한다는 뜻의 중강부중(重剛不中)이나 숯불을 안고 있으면서 서늘하기를 바란다는 포탄희량(抱炭希涼) 등이 그 뒤를 이은 것도 이를 반증한다. 정도와 중도가 없었던 한 해.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정치가 올바르고 큰 길로 복귀하기를 빌어본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